

농산물 유통 4단계→2단계 축소 온라인 거래·스마트 물류 대전환

농식품부, 유통구조 개선 방안

‘합리적 소비앱’ 내년 보급 추진
온라인도매 활성화 요건 완화
산지유통센터 2030년 300곳 확충
전자송품장 의무화로 투명성 제고

농산물 유통구조가 현행 4단계에서 1 내지 2단계로 간소화된다. 온라인도매 시장은 판매자 가입 요건이 완화된다. 또 알뜰소비 정보 등을 담게 될 대국민 모바일앱이 내년 중 보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 이러한 내용의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공급 불안 등 유통 환경 변화로 인해 농산물 가격 변동성이 심화하는 흐름을 보였다. 이에 기존 도매시장 중심의 제도개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농식품부는 이에 대응해 현재의 유통 구조를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만족하고, 기후위기에도 안정적인 디지털 기반 스마트 농산물 유통구조로 대전환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가격 안정화를 이루고 유통 비효율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목표는 배추·사과 등 핵심 품목의 가격 변동성 50% 완화와 유통비용 10% 절감이다. 이를 위해 4대 전략과 12개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누구나 플랫폼에서 거래 체결 후 소비자로 직접 배송(기존 4단계→1~2단계)하는 온라인 거래 중심으로 농산물 유통구조를 재편할 계획이다.

아울러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규모를



지난해 서울 서초구 aT센터에 설치된 ‘온라인도매시장 현황판’

/농식품부

현재 전체 도매유통의 6% 수준에서 2030년 50%까지 활성화할 수 있도록 판매자 가입 요건 완화에 나선다. 현재 요건은 거래 규모 연간 20억 원 이상의 개인·법인 사업자이다. 향후 이 요건 자체를 삭제할 방침이다.

또 물류비·판촉비용 등 판매자 및 구매자가 필요한 지원사업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맞춤형 바우처도 함께 제공한다.

농식품부는 주산지를 중심으로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를 확충하기로 했다. 산지 스마트화를 통한 유통·물류 효율성 제고의 일환이다. 또 자동 선별기 등 스마트 장비 지원을 확대해 스마트 APC를 2030년까지 300개소(2024년 기준 30개소)로 늘리고 구축한다.

도매시장의 경쟁 촉진 기반도 조성한다. 성과 부진 도매법인 지정취소 의무

화 및 신규법인 공모 등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이와 연계한 도매법인 평가 체계도 함께 개편할 계획이다.

도매시장 내 수급 불일치에 따른 단기 가격 변동성은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에 주요 품목을 대상으로 전자송품장 작성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 확대를 위한 지원에도 나선다. 소비자가 제철 농산물, 판매처별 가격, 알뜰 소비 정보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대국민 모바일앱을 내년 말까지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또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모바일앱의 기능을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이상기후에도 농산물이 안정적으로 생산·공급될 수 있도록 적정 재배면적 확보에 주력할 예정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공정위, ‘AI 업무혁신 전담팀’ 가동

업무 효율성·정확성 강화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원과 사건 처리 등 핵심 업무 전반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하기 위해 ‘AI 업무혁신 전담팀’을 15일 공식 출범시켰다. 이번 전담팀 신설은 공정위가 AI를 활용한 행정혁신을 본격화하고 업무 효율과 정확성을 높여려는 전략의 일환이다.

총 7명 규모로 꾸려진 전담팀은 기획조정관 산하 정보화담당관실에 설치되며, 기존 데이터팀 인력과 신규 임용 예정 직원이 포함된다. 전담팀은 ▲AI 혁신과제 발굴·기획 및 예산수립 ▲AI 법·윤리 가이드라인 마련 ▲AI 학습데이터 수집 및 품질관리 ▲AI 서비스 운영과 유지관리 ▲AI 모델·데이터 보안 관리 등을 맡는다. 공정위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소속 AI 전문가 자문단과 협력해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전담팀은 먼저 지난해 하반기 구성된 ‘AI 활용 업무혁신 TF’가 선정한 7대 혁

신 과제 구현에 착수한다. 기존 업무망에서 운영 중인 ‘AI 번역기’에 공정위 용어사전 기능을 추가하고, AI 기반 ‘유사 심결례·판례 검색’ 서비스를 내년부터 개시할 예정이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부처 협업 과제로 개발 중인 ‘AI융합약관심사플랫폼’과 ‘하도급 계약 공정화 지원 플랫폼’도 내년 말 개통이 목표다. 다만 대규모 연산자원과 개발 비용이 필요한 ‘민원접수 처리 효율화’와 ‘AI 기반 사건 처리 고도화’ 과제는 체계적 계획 수립 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AI 업무혁신 전담조직 신설로 민원·사건처리 과정에서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시장의 불공정 신호를 조기에 포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법적·윤리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AI 도입 과정에서 발생할 위험을 최소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효율적 행정서비스를 구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키르기스스탄 채소종자 생산시설 완공

농어촌공사, 식량안보 협력 강화

한국농어촌공사가 지난주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에서 ‘채소종자 생산기반 구축사업’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채소종자 보급체계 강화를 통해, 농업 생산성 및 식량안보를 높이기 위한 한국의 농업 부문 국제개발협력(ODA)으로 지난 2022년부터 추진돼 왔다.

국토의 90% 이상이 산악지형인 키르기스스탄은 지형 특성상 논 농업보다 밭작물, 채소 중심 재배가 발달했다. 하지만 수박, 마늘, 호박을 제외한 품목은 세계 평균 대비 생산성이 낮았는데, 그 원인 중 하나로 품질 낮은 종자의 유통이 지목돼 왔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과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함께 세우는 것이다.

공사는 키르기스스탄이 고품질 종자를 생산·연구할 수 있도록 종자 생산을 위한 물적 인프라를 구축했다. 비닐하우스

9동을 설치하고, 종자 선별, 가공, 저장에 위한 시설을 조성했고 입자선별기와 품압정전기 등 기자재를 지원했다.

아울러 성과관리 전문가를 파견해 키르기스스탄 정부 및 농업대학과 함께 장기적인 목표를 수립하고 종자 자급을 바탕으로 식량 자급을 이뤄낼 수 있도록 했다. 이후 종자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변모하기 위한 마스터 플랜 수립도 추진할 계획이다.

현지 반응도 긍정적이다. 추이주에서 양파를 재배하는 한 농업인은 “우수한 품질을 갖춘 종자가 보급되면 생산물 품질 또한 좋아질 것 같다. 더 많은 소득을 올리고 양파 재배 규모를 확대하고 싶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김성경 농어촌공사 글로벌사업처장은 “이번 사업은 키르기스스탄이 자체적으로 종자를 생산·가공·보관·보급할 수 있도록 한 패키지 지원”이라며 “키르기스스탄이 종자 자급을 통해 농업 발전과 식량 주권 확립을 이뤄내길 바란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한남, 우즈베키스탄서 K-난방 교두보 마련

MOU 성과 확인·현장 점검
바이오·스마트시티 협력 확대

한국지역난방공사(한남)가 9월 10~12일 우즈베키스탄에서 K-난방 사업 진출 활동을 전개하며, 중앙아시아 시장 확산의 교두보를 확보했다. 이번 일정은 몽골·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을 잇는 북방 비즈니스 여정의 마지막 방문지로, 한남은 현장 점검과 정책 협력, 기술 포럼 등 다각도의 사업 활동이 포함됐다.

정용기 한남 사장은 우선 지난 10일 뉴타슈켄트 신도시와 지자(Jizzakh) 지역 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며, 바이오매스 열병합발전과 스마트시티 연계 신규 사업 후보지를 점검했다. 현장 점검을 통해 인프라 구축, 연료 조달, 기자재 운송 루트 등 K-난방 시스템 적용 가능성을 확인했다.

11일에는 우즈베키스탄 열공급공사(Issiglikta‘minoti)와 ‘지역난방 현대화 및 열병합발전 분야 협력’ MOU를 체결했다. 우즈베크 열공급공사는 103개 노후 열원을 현대화하고, 지역난방 보급률과 재생에너지 도입 확대를 전담하



정용기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우측 두 번째)이 지난 12일 에너지 분야 투자협력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는 총리실 직속 기관이다. 정 사장은 체결식에서 “이번 MOU는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이 에너지, 환경, 경제 정책을 아우르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공식화한 것”이라며 양국간 적극적인 정보 교류와 협력 의지를 표명했다. 우즈베키스탄 열공급공사 일람 주라예프 사장은 “한남과의 협력을 통해 확인한 K-난방 기술과 정책적 노하우는 우즈베크 에너지 산업 혁신에 꼭 필요한 해법”이라며 “주진 중인 공동 프로젝트를 반드시 성공적

으로 발전시키겠다”라고 말했다.

같은 날 열린 기술포럼에는 현대와 위시스템, 장안기술 등 국내 8개 기업이 참여해 K-난방 기술을 소개하고 현지 진출을 위한 민관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

마지막 날인 12일, 정 사장은 미르자 마흐무도프 주라베크 에너지부 장관, 쿠드라토프 라지즈 투자산업통상부 장관과 연쇄 면담을 갖고 △뉴타슈켄트 에너지 공급 투자사업 △자카트 바이오매스 열병합 발전 △자라프산 LNG 기반 복합 화력 CHP 프로젝트 등 3대 중점사업을 논의했다. 장관들은 한국형 에너지 솔루션이 우즈베크 2050 에너지 전략과 탄소 중립 목표 달성에 핵심적 역할을 할 것임을 평가하며 적극적인 협조 의사를 밝혔다.

정 사장은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 K-난방 사업의 레퍼런스 국가”라며 “제도적 기반 위에서 친환경·고효율 에너지 인프라 확산을 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남은 이번 일정을 통해 북방 비즈니스 전략의 중요한 이정표를 마련하며, 글로벌 K-난방 확산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낙동강 녹조 조류독소 공동조사 착수

환경부·환경단체, 첫 공동 현장조사

환경부가 환경단체와 공동으로 낙동강 녹조 심화 지역에 대한 ‘조류독소 조사’에 착수한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환경단체 조사 결과에서 공기 중 조류 독소가 검출됨에 따라 지역 주민의 불안이 지속돼 왔다. 이에 투명하고 객관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공동조사가 마련됐다.

환경부와 환경단체는 이저 정부에서 조사를 위한 협의를 오랜 시간 진행했으나 끝내 조사에 이르지 못한 바 있다. 새 정부 출범 후 공동조사 협의를 재개해 이번에 함께 나서게 됐다.

조사는 환경부와 환경단체 협의에 따

라 국립환경과학원과 경북대가 조사기관으로 참여해 동일한 조사 지점과 방법으로 진행된다. 조사 대상은 낙동강 본류 구간 5개 지점이다.

구체적으로 ▲화원유원지(대구 달성군) ▲달성보선착장(대구 달성군) ▲본포수변공원(경남 창원시), ▲남지유채밭(경남 창원군) ▲대동선착장(경남 김해시)이다. 조사는 지점당 4회 실시하며 각 지점에서 원수와 공기 중 조류 독소를 모두 조사할 예정이다.

시료 채취는 국립환경과학원과 경북대가 이달 안으로 완료하고, 시료에 대한 분석을 올해 안에 마무리한 후 환경부와 환경단체가 공동으로 조류독소 조사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세종=김연세 기자